

‘공정말살 7인’ 그냥 둔 채 뉴스정상화 요원

“공정방송 저해행위 끝까지 감시할 것”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보도는 죄악이다. 더 나아가 없는 사실을 날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뉴스를 사유화한다면 범죄 집단의 소행이나 다름없다. 전두환 정권 당시 최철한 무덤과 같았던 겨울 공화국 아래의 언론이 오로지 한 명의 독재자를 위해 가위질하고 질식당해 있었던 데 반해 오늘날의 <MBC 뉴스>는 김재철씨와 운명을 함께 할 소수 부역 간부들의 앞날을 위해 철저히 유린되고 말살당하고 있다.

황 현 국장이 파업 기간의 '시용 보도국장'을 끝내고 선거방송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기긴 했지만 공정방송을 말살해 유례없는 장기 파업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들 간부 대부분은 여전히 보도 부문의 핵심 요직에 그대로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소수의 간부들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구성원들을 상대로 악랄한 보복 인사를 자행하고 파업 기간 중에 투입된 '시용기자' 감싸기로 조합원들을 차별하는데 혈안이 된 것 같은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파업 170일 동안 그들을 상대로 겪었을 인간적 실망감이 지대할 조합원들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집요하게 회식과 사적 대화를 강요하는 분별없는 행태들도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 MBC 뉴스의 명실상부한 정상화라는 지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잘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고 정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었다. 조합원들 간에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비열한 '공작'인 것이다. 기자회견 집행부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해 일단 자리를 만든 뒤 그 자리에서 있지도 않았던 대화 내용을, 그것도 자신들이 주장한 것을 기자회견이 제안한 것처럼 날조해 공개한 것은 선후배 관계를 떠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사기극이다. 희대의 사기극에 대해 황 현 국장은 이진숙이 기사를 거꾸로 썼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금까지도 아무런 사과나 한 마디 유감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지역 편견·적대감의 포로 김장겸

작년 한 해 MBC 불공정 보도와 관련한 논란의 진원지였던 김장겸 정치부장은 문책을 당하기는커녕 파업이 끝난 뒤에도 정치부장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부국장으로 승진했다. 김 부장의 대단히 위험하고도 편협한 뉴스관이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을 수시로 가져오는 근본 원인인 점은 보도부문 조합원들 사이에는 더 이상 비밀일 수 없는 공지의 사항이다. 김 부장은 평 기자 시절부터 특정 지역 출신이나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보이는 인사들을 상대로 공공연하고도 빈번하게 뿌리 깊은 적대감을 표현해왔다. 결코 '보수 성향'이란 표현으로 분류할 수 없는 그의 비합리적 사리 판단과 일 처리는 많은 구성원들의 반발과 우려에 부딪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최근에는 뉴스 아이템까지도 김재철 체제의 생존과 연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서 뉴스 사유화 논란의 한 복판에 서 있다.

‘보도국 통행금지’, 계엄령 때도 없던 만행

권재홍 보도본부장 등이 지난 5월 16일 시용기자 채용에 항의하는 보도부문 조합원들의 기자회견을 봉쇄하려고 보도국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킨 일은 일찍이 계엄령 아래서도 없던 만행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동안 보도부문 조합원들은 물론 파업에 참가중인 다른 부문 조합원들,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다른 부문 직원들까지도 5주 보도국 사무실로의 출입과 통행이 제한됐다. '사통팔달' 정보 유통의 한가운데에 있어야 할 공정방송 <MBC 뉴스>의 심장, 보도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치졸한 작태였다. 김재철씨의 지시를 권재홍 보도본부장과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황 현 선거방송 기획단장이 충실하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불공정 보도 문책 받았어야 할 7인

최기화 부국장과 김상철 논설실장은 작년 한 해 뉴스 편집 책임자로 일하며 MBC 뉴스의 불공정 편향 논란을 자초한데 대해 큰 책임을 져야할 인물들이다. 10.26 재보선의 편파 보도 논란과 한미 FTA 반대 시위 물 대포 진압 보도 누락, 김문수 경기지사의 소방관 전화 파문 등 주요 기사들이 잇따라 왜곡되거나 변형된 데는 관련 부서 못지않게 편집 1부장으로 있으면서 뉴스 편집 실무를 관장했던 최 부국장의 책임이 지대하다.

사익위해 '허위사실' 날조, 톱으로 보도

다음 날인 5월 17일 밤 이들은 전날 밤 권재홍 본부장의 퇴근길에 있었던 일을 날조해 <뉴스데스크>의 톱으로 보도하는 또 한 번의 가공할 만행을 저질렀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완벽한 '날조' 방송이었다. 동영상을 통해 거짓말이 하루 만에 발각되자 이들은 '정신적 충격도 충격이 아니냐'며 슬쩍 말을 바꿨고 기어코 이를 근거로 박성호 기자회견을 해고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까지 '권재홍 충격' 보도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의견이 쏟아졌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과는 물론 잘못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당시 황 현 보도국장은 당시의 기사작성 경위와 관련해 "권재홍 본부장이 전화로 불러주는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취재해 작성한 것이지 받아 쓴 것"은 아니라며 조합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어이없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MBC 창사 이후 최악인 5월 17일 밤의 '허위·날조' 보도 방송은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 현 당시 보도국장, 최기화 뉴스데스크 편집 담당 부국장, 문호철 편집 1부장의 책임 하에 이뤄졌다.

아침 뉴스 부국장을 역임하다 파업 기간 주말 뉴스 부국장을 거쳐 최근 인사에서 논설실장으로 영전한 김상철 부국장 역시 앵커의 클로징 멘트와 개별 아이템에 대한 부당한 통제와 간섭으로 원성을 샀던 인물이다. 박용찬 기획취재부장은 반값 등록금, KBS 도청 의혹, 한미 FTA 반대 시위에 김문수 경기지사의 소방관 전화 파문에 이르기까지 작년 한 해 굵직굵직한 사회 현안마다 기사를 축소 누락하거나 왜곡했다는 비판으로 편파 보도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던 인물이다.

기자회와 면담 내용 날조, 사기극까지

당시 보도국장이던 황 현 선거방송 기획단장은 이 모든 일의 발단을 제공한 책임도 받고 있다. 황 현 국장은 시용기자 채용에 항의하는 보도부문 조합원들의 항의 움직임이 일자 5월 16일 아침 기자회견부에 면담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보도국 수뇌부와 기자회견 집행부간의 면담이 이뤄졌다. 문제는 다음날인 17일자로 발행된 <회사특보>가 보도국 수뇌부가 요구한 내용을 마치 기자회견 집행부가 요구한 것처럼 날조한 일이다. "기자회가 보도국장과 대화에서 기자 채용 계획을 철회하면 기자 20-30명을 복귀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인데 그야말로 인격까지 의심케 할 완벽한 날조극

문호철 편집 1부장은 김장겸 정치부장 아래서 정치뉴스 데스크를 담당하면서 정치뉴스의 편파보도를 자초한 공범이다. 파업 기간 도중이던 지난 4.11 총선직후 문 부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은 듯 뉴스데스크 편집의 실무를 관장하는 편집 1부장으로 영진했다.

폭언, 협박문자 몰상식 간부도 포함

지금까지 거론된 7명 가운데는 "파업 하는 애들은 이참에 잘라 버려야 한다"는 폭언을 일삼았던 간부도, 또 파업 조합원에게 "근육 터지고 피 대하처럼 흐를 때까지"란 섬뜩한 협박 문자를 보낸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보직 간부도 포함돼 있다.

이들 7명이 뉴스를 좌우하는 요직에 남아 있는 한 뉴스 정상화는 실로 요원하고 지난한 과제일 뿐이다. 김재철씨가 완전히 쫓겨나는 날까지 뉴스를 농단하는 이들의 만행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도국내에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사적 대화, 식사, 회식을 방자한 파업 조합원들과의 일체의 접촉도 그동안의 과오를 합리화하고 또 다른 편파 방송을 자행하기 위한 예비 동작일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공정방송 투쟁을 벌여온 여러 동료들의 순수한 충정을 왜곡하고 헐뜯기 위해 언제든 지 비열한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들이 '공정방송'을 위해 170일 가까이 싸워온 동지들을 비방하고 폄하하거나 업무지시를 방자해 뉴스 왜곡을 시도하는 일을 단 한 순간도 방치할 수 없다. 조합은 업무 복귀 조합원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이들의 공정방송 저해 행위를 끝까지 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김재철, '해고 동료 복직' 게시물 무단철거 만행 항의하는 조합원에 '몰카 채증', 폭언까지



고요하던 사무실이 분노로 메아리쳤다. 어제(24일) 오전 김재철 측은 운영팀, 안전관리부 직원, 뿐만 아니라 6mm카메라 VJ까지 앞세워 해고 PD, 기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과 스티커 등 조합의 게시물을 강제로 철거했다. 김재철 측은 업무에 복귀한 파업 조합원들이 동료들의 복직을 염원하며 자신의 책상이나 파티션 등에 소중하게 부착해 왔던 게시물들을 아무런 동의 없이 마구 떼어 내고 훼손했다.

김재철측의 치졸한 탄압 대상은 보도국, 시사제작국, 교양제작국 등 해고 조합원들이 집중한 국실들이었다. 다시 한 번 김재철 측의 뒤들린 행태를 드러낸 이 사건으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들끓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구성원 대다수가 외부에 취재를 나가 있던 보도국(국장 황용규)의 경우, 김재철 측은 아무 거라김 없이 조합원들의 책상에서 함부로 게시물을 떼어냈다. 조합원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운영부장은 "국장의 지시였다"며 둘러대고 보도국장은 "윗선의 지시"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웃지 못할 행태를 보였다.

김철진 국장, 항의 조합원에 고성 폭언



가장 경악할 일은 교양제작국(국장 김철진)에서 일어났다. 김근태 운영부장이 "불법 게시물"이라며 함부로 게시물을 떼어내는 동시에 6mm 카메라 몰카를

돌리는 식으로 VJ가 조합원들을 채증하고 다닌 것이다. 6mm 카메라를 무릎 아래로 내리고 촬영하는 것은 <PD수첩>과 같은 고발 프로그램 취재에서 범죤나 비위 사실이 명백한 취재원이 적법한 인터뷰 요청을 거부할 때나 사용하는 방법이다. 떼떢하게 채증할 용기가 없는 김재철측은 자신들이 암살한 고발 프로그램들이 피지 못할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사용했던 취재 기법을 애꿎은 조합원들에게 써먹은 것이다. 후안무치하게도 김철진 교양제작국장은 항의하는 조합원에게 일말의 사과도 없이 폭언을 퍼부었다.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돼 버렸지만 교양 제작국장 김철진은 PD 수첩 담당 부장 시절 PD와 작가들의 책상을 함부로 뒤지다가 발각되자 "바쁜 PD를 대신해 책상을 치워줬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으로 장안의 조롱거리가 됐던 인물이다. 시사제작국처럼 몰래 철거할 경우 그전에 자신이 지지는 소행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켄긴 탓에 대놓고 철거에 나섰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신의 명백한 절도 행위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행위는 마치 갑자기 땅 밖으로 나온 두더지가 농부의 쟁기에 발톱을 휘두르는 격이다.

점심시간 틈타 조합 게시물 도둑 철거!

조합원들의 항의가 두려웠던지, 출근 전에 몰래 철거한 부서도 있다. 시사제작국(국장 김현중)에서는 조합원들이 출근해보니 30개 가량의 손팻말과 스티커가 밤새 철거돼 있었고, 남은 게시물 역시 배연규 부국장이 6mm 카메라를 앞세워 철거하던 중이었다. 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한 절도 행위라며 엄중히 경고하자, 김현중 국장은 "내가 지시한 바 없으며 배연규 부국장이 5개만 철거했다"고 주장하면서 "국 끓여먹을 것도 아니니 되돌려주겠다"는 실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교양 제작국(국장 김철진) 또한 수많은 조합원들의 눈을 피해, 점심 식사 시간에 게시물을 또다시 철거하는 치졸한 짓을 반복해 안 그래도 화가 치밀어 있던 조합원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김재철 측은 사내 질서 유지란 허울뿐인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압박하는 전황을 부러왔지만 실상 사내 질서를 어지럽혀 온 건 다름 아닌 김재철 측이란 사실이 이 게시물 훼손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김재철측이 철거한 것은 조합과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유물이다. 정당한 소유물에 주인의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것을 "절도"라 부른다. 김재철 측은 법인 카드 부정사용과 J씨 일가에 대한 각종 성심식상 특혜 제공으로 공영방송 MBC의 재산을 축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조합과 구성원들의 소유물에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해고 동료와 연대감 표시마저 차단 흥계

해고 동료의 복직 염원을 담아 조합원들이 부착한 손팻말과 스티커는 결코 김재철측이 '불법 게시물'이라고 폄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일터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해고된 동료들과는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겠다는 소중한 의지와 다짐의 표현이다. 해고된 동료들과 연대하겠다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조합원들의 심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합원들의 강고한 연대가 김재철과 부역자들을 응징할 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합원들이 해고자에게 가지는 최소한의 연대감마저 박탈하고 함부로 조합 재산에 손을 대는 몰살 행태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조합원들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지 말라. 단협 17조 1항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 활동으로 행해지는 각종 유인물, 인쇄물의 게시, 배포 등 홍보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뻔질나게 법을 들먹거리길 좋아하면서도 사측은 표현의 자유가 걸림당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21조는 모르는 모양이다. 법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측에게 유대한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를 인용해 대꾸하고 싶다. "그것은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진정 불법이 싫다면, 구성원들을 상대로 시골 뒷간만도 못한 좁은 도량만 보여줄 게 아니라 배임, 횡령을 자행하고도 10층에 늘어붙어 있는 중죄인 김재철부터 감옥에 보내야 한다. 그것이 당신들이 숭배해 마지않는 "법"을 지키는 길이다!

"단협이 사규에 우선", 조합 게시물 철거는 불법 김재철측은 불법 탄압책동을 중단해야

김재철측은 보도와 편제부문에서 벌어진 조합 게시물 철거 사태와 관련해 사규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든 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상습적인 못된 버릇에서 기인한다.

김현중, 조합원들에 단체문자 발송 협박

실제 김현중 시사제작국장은 이번 철거사태의 근거로 취업규칙 제7조 6항을 들어 조합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 김 국장이 든 취업규칙에는 "사내방송을 하거나 유인물 기타 게시물을 사내에 배포, 부착, 홍보하는 경우" "직원은 사전에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노사간의 약속인 단체협약 제 17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회사는 조합활동으로 행해지는 각종 유인물, 인쇄물의 게시, 배포 등 홍보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은 절차에 따라 사내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조합의 홍보활동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단체협약이 사규보다 상위조항이 경우 사규와 단협 중 어느 것이 우선할까? 당연히 단협이 우선한다. 단협 제5조에는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각 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이 협약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단 이 조항을 들지 않더라도 단협은 사실상 노동법에 준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단협이 사규에 우선하는 것이다.

김재철측, 부당노동행위 중단해야

사측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규를 들어 조합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단협과 관련된 김재철의 약행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단협이 자신의 제약적 경영행태에 방해된다고 보고 지난해 언론사 사상 초우로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은데다, 조합에 밀려 새로 단협을 체결한 뒤에도 불과 한 달 반 만에 단협을 파기해 사상 최장기 파업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조합은 김재철 같은 무뢰한이 다시는 MBC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조합 상대 195억 원 손배소, 인지대만 8000만원

김재철 사장과 사측은 파업에 따라 회사의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등 손해를 봤다는 억지 주장을 들먹이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금액을 195억 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측은 지난 3월에 제기한 손해액 33억 원을 19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서를 지난달 22일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했고 노동조합으로는 지난 2일에 사측이 새로 제출한 변경서가 송달됐다.

문학적 금액의 소송 폭탄 역시 지난 달 27일 일부 일간지에 낸 신문광고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종대만 과오와 악질적 죄상을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배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회사 돈으로 김재철 변호는 배임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김재철 사장이 전단지 살포 등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 역시 회사의 경비로 법률 대리인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점이다. 조합은 공영방송 사장에 걸맞지 않은 김재철 본인의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지적했을 뿐 공영방송 M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오히려 MBC 사장이란 자리가 지닌 상징성과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행태로 MBC 사장물고 광범한 대가로 회사가 8000만 원이란 거액을 인지대로 날려버리게 된 셈이다. 조합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회사가 어찌되든, 또 회사 돈을 물 쓰듯 써서 손실을 입히든 말든, 곧 MBC를 떠나게 될 자신들은 알 바 아니라는 김재철 측의 소아병적인 해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천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배임 행위

한국의 노동 탄압 역사를 새로 쓸 정도의 천문학적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김재철 측은 법원에 소송에 따른 인지대로 80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철 측이 합리적으로 사태를 풀지 않고 노조 탄압에만 골몰하고 광범한 대가로 회사가 8000만 원이란 거액을 인지대로 날려버리게 된 셈이다. 조합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회사가 어찌되든, 또 회사 돈을 물 쓰듯 써서 손실을 입히든 말든, 곧 MBC를 떠나게 될 자신들은 알 바 아니라는 김재철 측의 소아병적인 해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천